

왜 북한에서는 한자를 폐지하였는가?

고영진

1. 들어가는 말

1.1 이 글의 목표는, 해방 직후 북한에서의 「한자제한론」과 「한자폐지론」을 검토해 봄으로써, 왜 북한에서 한자가 폐지되었는가를 밝히는 데에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자는 동아시아의 「언어의 근대화」 과정에서 대단히 골치 아픈 문제의 하나였다. 예컨대, 중국에서도 일찍부터 한자개혁운동이 일어났던 바, 1949년 10월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자 “문자는 반드시 개혁하여, 세계 공통의 문자인 표음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데, ‘그를 위해서는 준비가 많이 필요하’므로 “표음화 이전에 한자를 간략화하여 현재에 도움이 되게 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준비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모택동의 1951년 지시가 문자 정책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興水 1967:401). 일본에서도 한자 폐지는, 막부 말기와 메이지 초기는 물론이고(イ・ヨンスク 1996:26~47), 패전 직후에도 「국어개혁」의 주요한 테마 가운데 하나였다(村井 1979:53~59). 이와 같이, 한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한자가 사용되고 있는(혹은 있던) 곳이라면, 나라에 관계없이, 항상 논쟁의 불씨였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남북한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남한에서는 1948년에 법률 제6호로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한글전용의 토대를 놓았고, 북한에서는 명시적인 법률을 제정한 흔적은 보이지 않으나, 오늘날에는 한문 교과서 등 특수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는 어디에도 쓰이지 않는다. 즉, 베트남을 제외한다면, 한자의 폐지에 성공한 나라는 현재로서는 북한이 유일한 것이다. 물론 남한에서도 거의 한글전용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한자의 「전폐」와는 거리가 멀다.

1.2 문자의 문제는 「언어의 근대화」 및 언어 정책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언급들을 제외한다면, 남북한을 막론하고, 북한의 「한자폐지」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남한에서 나온 연구로는 고영근(1994)가 있는데, 이 글은 대단히 성실하게 북한의 「한자폐지」과정을 추적한 글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는, 언어 정책에 대한 물이해가 종종 눈에 띄며, 모처럼 「문자개혁」과 「한자폐지」를 함께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함께 묶어 보려는 시도가 없는 것은 무척 아쉬운 점이다. 또한 이 글은 지나치게 실증적으로 접근한 나머지, 북한에서의 「한자폐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것이 「왜」 단행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북한에서 나온 업적으로는 『조선로동당정책사(언어부문)』(1973:108~135) 및 김인호(1975) 등이 있다. 이들은, 「한자폐지」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들을 제시해 주고 있기는 하나, 앞의 고영근(1994)와는 반대로, 실증적인 사실의 제시보다는 사회·정치적 「해석」에 치우쳐져 있다. 게다가, 6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서 나온 문헌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지만, 이 두 글에도 예외없이 이른바 「주체사상」의 입장에서 「재해석」된 부분들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이들 업적만을 가지고는 북한에서 이루어진 「한자폐지」의 전모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1.3 위의 논의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북한의 「한자폐지」에 대해서 밝혀진 것보다는 밝혀져야 할 것들이 훨씬 더 많다. 뿐만 아니라, 「한자폐지」는 그것과 거의 동시에 시행된 「문맹퇴치」 등과 함께 검토하지 않으면 그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에서, 되도록이 이른 시기의 자료들을 중심으로, 초창기의 다른 언어 정책과 관련지어 가면서, 북한에서 한자가 폐지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밝혀 보고자 한다.

2. 「한자제한」인가, 「한자폐지」인가?

이차대전 후 식민지에서 독립한 거의 모든 나라들은 언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구 중주국의 언어와 관련이 되는 것이다. 식민

지 시기에는 종주국의 언어가 지배 언어였고, 민족어는 소수 언어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도 민족어는 철자법과 어휘 규범, 문법 규범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일종의 방언과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식민지에서 독립하자마자 남북한은, 조선어로 교과서를 편찬했고, 조선어로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남한에서는 해방 직후인 1945년 8월 25일에 열린 조선어학회의 긴급 총회에서 “교과서가 없어 공부 못하는 초·중등 학교의 시급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계·문필계·언론계 등 여러 방면의 협력을 얻어 우선 임시 국어 교재를 엮기로” 결의하고, 9월초에 「국어교과서 편찬위원회」를 설치하여 작업을 한 결과, 같은 해 11월 6일에는 『한글 첫걸음』이라는 교재를 만들어 냈다(한글 학회 50돌 기념 사업회 1971:293).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조선어학회는 『초등 국어 교본(상, 중, 하)』(1945.11~1946.1) 및 『중등 국어 교본(상, 중, 하)』(1946.1~1947.5)을 잇달아 간행해 냈다(한글 학회 50돌 기념 사업회 1971:299~300). 북한에서는 이보다 좀 늦은 1946년 5월 12일에 채택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교과서 편찬·인쇄에 관한 결정서」가 나오면서 조선어로 된 교과서를 발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여, 1947년 8월에는 75종의 교과서 75만 8천부를 출판 보급하였다(신효숙 2003:193~200).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을까? 그 이유로는 해방 직후의 조선어는, 비록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철자법은 물론, 규범 문법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조선어학회에 의하여 제정·공표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이 철자법 규범의 역할을 했다면, 최현배의 『우리말본』(1937)은 규범 문법으로서 손색이 없는 것이었다. 다만, 어휘 규범으로서의 사전만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것은 1942년 10월에 발생한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전 편찬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이 「조선어학회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어학회는 “학술 단체로서 민족 독립 운동을 벌인 유일한 학회로서 높이 추앙되었”고, 이에 따라 “과거의 간행물은 물론 학회의 활동 하나하나가 가장 권위와 위력을 가진 것”이 되어 “(해방) 당시는 문교부보다도 더 힘 있는 국어 보급 운동을 전개” 할 수 있었다(김민수 1984:536). 사정이 그러했으므로, 해방과 함께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조선어 표준말 모음」은 즉각 실시에 옮겨졌으

며, 불문율로 모두가 본받으려는 정서법과 표준말의 규정이 되”(김민수 1984:537)였다. 그리하여 이들 규범들은 「한국어의 근대화」, 즉 언어의 측면에서 「반봉건」의 선봉이 되었다. 그리고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목숨까지 잃어 가며 지키려고 했던 것으로 인식된 한글도 자연히 해방 후에는 민족 독립의 상징, 즉 문자의 측면에서 「반제」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므로 문자 문제와 관련한 해방 직후의 선택지는, 남한이든 북한이든, 한자를 제한할 것인가 혹은 한자를 완전히 폐지할 것인가 하는 것뿐이었다고 할 수 있다.

2.1 한자제한론

남한에서는 “대한 민국의 공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는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이 1948년 10월 9일에 제정· 공포되어 시행(김민수 1984:912)되다가, 「국어기본법」이 2005년 1월 27일에 제정되면서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었다(「국어기본법」의 부칙 제2조). 그러나 새로이 제정된 「국어기본법」의 제14조 1항에는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한글전용은 더욱 강화되었다.¹ 그렇다고는 해도, 그것은 공문서에 한한 것일 뿐, 사문서인 경우에는 사실상 개인의 자유에 맡겨져 있음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반면, 북한에서는, 일정 기간 학술 용어 등에서 한자의 부분적 사용을 허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1949년 3월 이후에는 한글만으로 문자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적지 않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며, 북한에서도 처음부터 한글만으로 문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즉, 「한자제한론」과 「한자폐지론」이 북한에서도 대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2.1.1 해방 후 북한에서 나온 「한자제한론」은 박상준(1949)에서 볼 수 있다. 그는 우선 수량상으로 보아 “한자어가 전 조선말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박상준 1949:37)을 먼저 지적한다. 물론 “완전한 조선말 사전이 아직 생기지 못한 현실에서 있어서는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고, 또는 계산

하는 표준을 따라서 수량이 훨씬 달라지게 되는 관계가 있으므로, 이제 확실한 통계적 수량을 발표할 수 없는 사정”(박상준 1949:37)은 인정한다. 둘째로는, “우리 글‘자가 일찌기 생기여 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글‘자라고는 다만 한자 한가지만 오래 동안 쓴 것”이 한자어가 늘어난 “력사상 가장 증대한 원인”이라고 말한다(박상준 1949:40~43). 셋째로는, 성격상으로 보아 “고립어(孤立語) 또는 음절어(音節語)인 한자어는 설명어(說明語)로서는 결점이 많으나, 체언(體言)을 만들기에는 가장 우수한 말”(박상준 1949:44)이라는 사실이 또한 한자어를 늘어나게 했다고 본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용어의 부면을 차지하고 있는 한자어는 그 성격상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용어가 대단히 많을뿐 아니라, 순수 조선말이 아니고, 외래어인 한자어이기 때문에 일층 해석하기 어려’운 점, “한‘자의 상식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다만 기계적으로 기억할 뿐이지, 철자하기가 지극히 복잡하다”(예:十里-십리, 십니, 십니, 십리)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박상준 1949:45).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가 내 놓은 것이 한자어의 정리였다. 우선 ‘한자의 뜻과 관계없는 인명이나 지명, 동식물명, 천문, 지리, 신체, 친척 칭호 등에 관한 한자어는, 대개 직관적 실험적으로 알 수 있으니 한자의 해석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한자와 관계없는 순수 조선말로 잡아야 한다’(박상준 1949:47~48)고 말한다. 둘째로, ‘곳곳-처처, 집집-가가’ 등과 같이, ‘뜻이 꼭 같은 말로서 순수 조선말과 한자어의 두 가지가 있는 것은 되도록 한자어는 쓰지 아니함이 좋다’(박상준 1949:48~50)고 본다. 셋째로, ‘문, 방, 창’처럼, “어원적으로는 틀림없는 한‘자어라도, 벌써 한자의 상식이 없는 사람까지 일반적으로 완전히 순수 조선말과 같이 쓰고 있는, 통상적 한‘자어는 그대로 순수 조선말과 같이 잡음이 마땅”(박상준 1949:50)하다.

2.1.2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여전히 문젯거리였다. 이에 대하여 박상준(1949:51)은, ‘한자는 전폐함을 원칙으로 아니할 수 없으나, 과도기인 현재의 실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제한적으로 한자를 쓸 것을 제안하고 있다.²

첫째는, ‘가연물(可燃物), 가용물(可溶物) 감전(感電)’ 등과 같이, “한자의 표시가 없으면, 비록 지식층이라도 그 뜻을 얼른 알 수가 없”(박상준

1949:51)는 것들이다.

둘째는, “초학자라 할지라도 새로 한'자어를 연구함에 있어서 필요한 용어에 한해서는 한자를 배우면서 한자어를 연구하는 것이 훨씬 능률을 올리게 되는”(박상준 1949:52) 경우이다. 예컨대, 「인심」(人心)과 같은 경우에는 조선어로 그 의미를 배우기보다는, 한자로 인(人)과 심(心), 두 자를 배우면, 저절로 인심의 뜻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인(人)자가 들어가는 단어 약 8-90개는 배우지 않아도 사람과 관련되는 것임을 짐작하게 되며, 심(心)자가 포함된 약 100단어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마음과 관계되는 말임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박상준 1949:52)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서 “가장 많이 응용되는 한자 100만 알면 그 100자가 이리저리 응용되는 한자어와 그 100자 밖의 한자와 섞이는 한자어를 합하면 5,000 내지 10,000자의 한자어를 대개 짐작하게 되므로, 한자어의 의미 해석과 철자에 관한 기초적 상식이 생겨 아무 렬락관계 없이 분산적 기계적으로 한자어를 연구함에 비하여 아무리 줄 잡아도 2배 이상의 능률이 오르게 되는 것이다.”(박상준 1949:52) 그러나 한자는 수가 많으므로 그것을 다 배울 수는 없고, “만일 한'자를 많이 배우면 그한'자 학습의 무거운 짐에 눌러서 필요한 다른 학습은 저절로 희생이 될 수밖에 없으니, 이는 곧 쇠뿔을 고치려다가 소를 죽이는 셈이 되는 것”(박상준 1949:52)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가용성」(可鑄性)과 같이) 한자의 해석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 용어에 관한 한'자 이외의 것, 곧 학습 능률을 올리기 위한 한'자는 가장 응용 범위가 넓은 한'자 약 200자를 선택하여 이는 인민학교에서 가르침이 마땅”하다는 것이다(박상준 1949:52). 실제로 박상준은 여기에 해당하는 한자 200자를, 「상용 한'자」라 하여 따로 제시하고 있다.

셋째는, “현실 지식층을 무시하고서는 민주 과업을 빨리 완수할 수 없는 데, 현실 지식층의 능률을 올리게 함에는 최소한도의 필요한 한'자를 아니 쓸 수 없”(박상준 1949:52)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괄호 안에 넣”(박상준 1949:53)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조건에 모두 맞아야 한다(박상준 1949:54).

- (1) 현대의 정치, 경제 문화의 기초적인 한'자어에 쓰이는 한자
- (2) 한'자의 뜻으로 해석함이 평이 정확(平易正確)하게 되는 한'자어에 쓰이는 한'자

- (3) 그 한'자가 현대어(現代語)에서 세가지 이상으로 응용되는 것, 곧 “鼓動, 鼓舞, 鼓吹”에서의 “鼓”와 같이 세가지 이상으로 응용되는 한'자
- (4) 현대의 보통 지식층이 대개 알 수 있는 한'자

위의 네 가지 기준에 들어맞는 글자는 약 800자인데, “이는 어느 학교에서도 정식으로 가르치지 아니하고(한문 전문 연구 과목은 제외함), 다만 필요한 기록에 한하여 참고로 기입함이 마땅”(박상준 1949:54)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한'자 전폐의 원칙 아래에서 당분간 한'자를 씀은 대개 기성 지식층의 독서 능률 제고를 위함이 중심인즉, 한'자를 모르는 초학자(初學者)는 인민학교에서 정식으로 가르치는 200자의 기초지식을 잘 응용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학자습적으로 연구할 수 있고, 200자 이상은 몰라도 대체로 큰 관계는 없는 까닭이다.”(박상준 1949:54) 이어서 박상준은 여기에 해당하는 한자 800자를, 「허용 한'자」라 하여 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각종 기록에서 한자를 섞어 쓰면 한자를 모르는 사람은 언제까지든지 각종 기록에서 완전히 제외(除外)되기 때문에, 인민의 민주 과업을 빨리 완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니, 이는 곧 민주주의의 원칙에 벗어나는 차별적 봉건적 진행(進行)이라고 아니할 수 없”(박상준 1949:51)으므로, 한자의 사용은 어디까지나 과도적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2.1.3 다음으로 「한자제한론」이 강했던 곳은 역시 학술 분야였던 것 같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찾지 못했으나, 「학술 용어 사정 위원회 의학 용어 분과 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리익환(1949:66)의 다음 증언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는 “학술 용어 사정 위원회” 안에 설치된 “실용 한'자 제정 분과 위원회”³의 사명이 한'자 폐지를 완수하기 위한 준비로서 잠시적으로 한'자를 제한하는데 있을 것을 주장하며, 또한 이러하리라는 것을 믿는 바이다. 제 개인의 의견 같아서는 차라리 “한'자 폐지 분과 위원회”로서 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학술 용어 사정 위원회」 안에 「실

(?)용 한'자 제정 분과 위원회」를 두었는데, 거기에서는 한자의 전폐가 아니라, 그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모양이다. 이와 같이 된 데에는, 한자를 폐지하고 나니까, 학술 용어의 빈곤은 물론이고, 곳곳에서 불편하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즉, 한자를 폐지해야 한다고 해서 폐지하고 보니, 무수히 생겨나는 동음이의어는 물론이거니와, 원래의 한자를 보지 않고서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들이 속출했던 것이다. 예컨대, 리익환(1949:64~65)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모든 신문, 잡지가 거의 모두 한'자를 달지 않고 한글만으로 출판되고 있기는 하나, 과학 용어의 통일이 없이 단지 한'자의 음을 한글로 옮겨 적는데 그치었기 때문에, 도리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을 느끼게 하며 심지어 한'자를 폐지하여서는 아니 되겠다는 거꾸로 결론을 짓게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학술 논문들에서는, 한자 사용이 폐지된 것으로 알려진 1949년 3월 이후에도, 괄호 안에 한자를 넣는 일은 물론이고, 한자를 노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므로 학술 용어와 관련해서는, 꽤 오랜 기간 동안 한자의 병용이 요구됐고, 또 허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2 한자폐지론

2.2.1 한자폐지론의 등장 배경

해방 직후 북한에서 표방했던 슬로건이 「식민 잔재의 청산」과 「토지개혁」으로 대표되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 먼저 1946년 4월 6일에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에서는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발표하여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김성보 2000:144). 거기에 그치지 않고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중요 산업시설의 국유화», 「8시간 노동법령», 「남녀평등법」 등과 같은 일련의 개혁 조치들을 연달아 내놓았다.

이와 같이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면에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민주개혁」을 원만히 수행하고, 아무래도 서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남한

과의 경쟁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동원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을 설득하고 계몽하여, 「민주개혁」에 동참시키는 일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이를 위한 수단이라고 할 만한 것이 당시 북한에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문맹이었기 때문에 문서를 통한 그들의 교육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여타의 문화 시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여기에서 북한 당국이 눈을 돌린 것이 「문맹퇴치」였다. “전국민적으로 되는 준중적으로 되는 건국정신총동원과 사상의식을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김일성(1946c:192)의 이 호소는 나중에 「건국사상총동원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문맹퇴치」는 바로 이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북한에서는 전 국가적으로,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문맹퇴치」에 온 힘을 기울였고, 그 결과 1949년초에는 대부분의 문맹이 퇴치되어, 대부분의 인민들이 한글의 읽고쓰기와 간단한 가감승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⁴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한자였다. 왜냐하면, “원수 왜놈들의 야만적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으로, 극 소수를 빼 놓고는 근로 대중의 거의 모두가 문맹이었던 조선 인민이었었으나, 해방 후 3년 동안에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전체 인민들의 열성적 투쟁으로 문맹퇴치 사업에 큰 성과를 거두어, 이제 문맹의 거의 전부가 멀지 않아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어려운 한문을 배운 것도 아니요, 또 우리 말 공부를 깊이 한 것도 아니”(박경출 1949:87)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한자를 쓰게 된다면, 「문맹퇴치」를 통하여 이제 겨우 문자의 세계로 들어온 230만에 달하는 대중들은 다시 문자 생활에서 멀어지게 된다. 이것은 명백한 퇴보이다. 왜냐하면 “모든 정치와 문화 건설은 절대 다수의 근로 대중의 참가없이 불가능한 때문이다”(박경출 1949:89).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자폐지」의 직접적인 계기는, 「문맹퇴치」의 결과 새로이 한글의 읽고쓰기를 익힌 사람들을 문자의 세계로 끌어들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동참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당시 북한에서의 개혁 조치의 두 상징(이종석 2000:68~69)이었던 「토지개혁」과 「중요 산업시설의 국유화」와 관련지어,

해석해 보고자 한다.

2.2.1.1 북한에서 한자를 폐지한 배경으로 가장 먼저 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토지개혁」이다. 「토지개혁」은 기본적으로는 봉건적 요소의 척결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식민지 치하에서 대부분의 지주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친일 행위를 했다(이종석 2000:69)는 점을 감안한다면, 거기에는 식민 잔재의 청산이라는 성격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토지개혁」이 야말로 당시 북한이 표방했던 슬로건인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상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토지개혁」 조치의 정착을 위하여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토지개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이 가지는 의의 및 정당성을, 농민들에게는 물론, 당원들에게도 납득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왜냐하면 당시는, 농민들만이 아니라, 당원들조차도 정치적·문화적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토지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수 많은 「좌우경적 오류」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말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 예를 들면, “함남도와 평안도 일부 지방들에서는 지주가 아닌 5정보 이하의 토지를 소유한 부농과 중농을 지주로 규정하고 그들의 토지를 몰수한 일이 있었으며 황해도에서는 5정보의 토지를 가진 부농들에게서 가옥을 몰수하고 토지를 분여하지 않으려 하였던 사실이 있었”으며, “황해도에서는 소작인이 지주를 대신하여 그의 소유 토지를 자기의 것이라고 하여 옹호한 사실이 있었으며 평남도에서는 민족반역자를 은폐한 사실도 있었”던 것이다(김일성 1946a:62). 이러한 「좌우경적 오류」들은 꽤 있었던 것 같으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토지개혁」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그러므로 당의 차원에서 “동요분자들과 우경분자들을 숙청하고 당내에서 부농 사상의 유입과 그의 영향의 침입을 배제”(김일성 1946a:63)함과 동시에, “농민들에게 우리의 정당한 위업의 승리에 대한 신심을 제고시키며 그들을 친일분자 민족반역자 반동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불러 일으키는 선전사업을 맹렬히 전개”(김일성 1946a:70)할 필요가 있었다.

다음으로, 「토지개혁」의 결과로 빈농이나 고농에게 분여된 토지의 전매나 저당을 금지했는데(이종석 2000:68), 이것은 행정적인 면에서 「토지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토지개혁」이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안할 때에, 이러한 조치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

그리고 수확량을 높임으로써 토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토지개혁」이 성공했음을 대내외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기도 했으므로, 이를 위해서도 온 힘을 쏟아 부었다. 게다가 당시는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허덕이고 있었기 때문에 수확량을 높이는 것은 더더욱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발등의 불이었다. 만일 수확량이 「토지개혁」 이전보다 떨어지거나 했을 때에는, 그 후폭풍은 거셀 것임에 틀림없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을 당시의 북한 당국은, 토지 수확량을 높이기 위하여, 농민들의 설득에 온갖 힘을 기울였다. 그 한 예로, 김일성은 1946년 4월 10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중앙제6차 확대위원회」에서 행한 보고 『토지개혁의 총결과 금후 과업』에서, 「토지개혁」을 총괄한 다음에, 「우리의 과업」의 첫번째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로 토지는 이미 지주에서서 몰수되어 농민에게 분여되었습니다. 이 토지는 생산성이 높은 토지로 되어야 할 것이며 증산의 토지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토지개혁후 토지를 묵힌다든지 수확고를 적게 낸다든지 하는 것은 반동분자들의 악선전을 유리하게 하는 것이며 토지개혁의 정치 경제적 의의를 말살시켜 버리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당면 구호는 해방된 조선의 첫 봄을 증산을 위한 투쟁으로 맞이하며 분여받은 토지는 한고량도 묵히지 말자는 것입니다. 당은 이 구호의 실천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은 자기의 총역량을 춘기과종 캄빠니아에 집중시키며 지주들의 예측에서 해방되어 처음으로 자기 땅에서 농사하는 농민들을 조직 지도하여야 하겠습니까. 종자 축력 농구 비료등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하여 주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춘기과종사업을 성과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농촌사회단체들을 발동시키며 농민들 속에서 호상 협조의 정신을 발양시켜야 할 것입니다.(김일성 1946a:66)

이와 같이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적이며 생산적인 영농 계획의 수립’(김일성 1947a:245)과 함께, “수확고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토질을 훨씬 개선하여야 하며 개량된 농작 방식으로 변하여 새농작 방식으로 즉 추경

조기작물 다년초재배 종자선택등 기타 방식을 적용”(김일성 1947b:266)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근로농민대중이) 선진과학의 성과를 원만히 적용하면서 자기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는데서만 실행할수 있는 것”(김일성 1947b:267)이었다.

이와 같은 「과학적 영농」과 「토지개혁의 의의 및 정당성」을 농민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계몽과 선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농민들의 대부분이 문맹이었다는 사실이다.⁵ 그래서 실시한 것이 「문맹퇴치」였고, 그 결과 농민들도 이제 겨우 한글의 읽고쓰기 정도는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한자까지 섞어 쓴다면 농민들은 다시 문자의 세계에서 멀어지게 되며, 그렇게 된다면 문서를 통한 농민들의 계몽은 아예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임은 명확하다.

2.2.1.2 「중요 산업시설의 국유화」도 「한자폐지」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국유화 조치의 정당성」을 노동자들에게 설득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자 및 기능공이 무척 부족했던 당시 상황에서 그들을 교육시켜 하루빨리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키는 것이었다. 이 가운데에서 후자는 이른바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직결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한자폐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해방 직후 북한에서는 기술자들의 부족으로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었다. 예컨대 당시 북한에서 “비료 공장을 비롯하여 5대 공장이 집결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공업 도시이며 화학 공업 중심지”이자, “근대적 공업 노동자 2만 7천 명이 집중되”(리국순 1960:184)어 있어서, “전체 북반부 노동 계급의 10분지 1을 차지하”(리국순 1960:180)고 있던 홍남 지구의, 홍남 비료 공장의 사정은 다음과 같았다.

(네째로) 기술자, 전문가 그리고 고급 기능자의 극심한 부족이다. (중략) 비료 공장에는 일제 말기에 기술자가 류안 비료 부문에만 240명 있었는데 조선인 전문 기술자는 6명밖에 없었다. 그것마저 일부는 해방 후 노동 계급을 배반하고 남조선으로 도망쳤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소수의 기능 노동자들은 기술자들이 감당하여야 할 일까지

대신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 기능자의 수도 적었을 뿐 만 아니라 또한 그의 수준이 낮았다.

특히 이 공장의 핵심 직장들인 합성 질소, 가스, 변류 부문에서 일한 조선 노동자들 가운데는 초보적인 기술 지식이나마 가진 기능자는 매우 적었다. 합성 직장 촉매 공정에는 조선 사람은 급사 한 사람 밖에 없었다.(리국순 1960:187)

이와 같이 과학기술자가 대단히 부족한 데다가, “공장 관리와 생산 조직에 전혀 경험이 없는”(리국순 1960:174) 상황에서 「산업시설의 국유화」는 단행되었던 것이다. 아마 그 여파이겠지만, 실제로 국유화 조치(1946년 8월) 이후인 1947년 1월에는 “(생산 실적이 계획에 비하여) 성진제강소의 40% 해주기계공업이 22% 문천기계공업의 31% 남포제련소의 44% 사리원방직 42%” 등에 지나지 않았고, “1월 또는 2월에 있어서 50%이하의 실적에 떨어져 있는 기업소는 이 전에도 강선제강 부령전기야금공장 용암포 문평의 각 제련소와 마동 해주 내천리 등의 세멘트 공장 신의주팔공공장 남포화학공장” 등이었다(산업국장 1947:228).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을 생산에 적극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 자신이 직접 나서서 “새법령에 의하여 북조선림시위원회의 수중으로 완전히 넘어오게되는 공장 제조소 탄광 및 광산 발전소 철도 체신기관 은행등은 지금에와서는 개인기업가나 외국자본가들의 수중에 있을 것이 아니라 인민위원회의 관리하에 즉 인민주권의 관리하에 있게될것”이므로 “우리의 공업은 우리노동자들의 로력착취의 수단으로 또는 자본가들의 리유희득의 수단으로 운영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인민의 복지를위하여 이바지하게될것”이라고 호소하였던 것이다(김일성 1946b:112). 이어서 김일성(1946b:112~113)은 “이제는 우리가 왜놈들을 위하여 일하는것이아니라 자기자신을 위하여 전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는것”이고, “우리가 일을 더 잘하면 더 잘할수록 우리공장 제조소는 산품을 더 많이 생산할것이며 상품을 더 저렴하게 인민들에게 분배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한다.

노동자들의 설득과 더불어 반드시 필요했던 또 하나의 문제는, 「과학기술의 대중화」를 통하여, 기술자 및 기능공을 하루라도 빨리 양성하는 것이었다. “우리공업을 더 우수하게 관리하는것을 배워야하며 아직까지 운영하지

않는 기업소들을 신속히 작업하게하며 필요한 원료와 로동력을 확보하”(김일성 1946b:112)기 위해서도, 그것은 한시가 급한 문제였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로동자 기술자 특히 우리청년학생들은 자기의 자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배우고 과학과 기술을 련마하여 우리의 공업 우리의 경제의 우수한 지도자가 되”(김일성 1946b:113)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게다가 화학공업의 경우에는 농업 생산의 증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화학비료의 생산과 직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커다란 역할을 했던 것이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의 일환으로 공장의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된 「생산돌격운동」이었는데, 이 운동은 정주군 기관구 철도기관사 김회일(金會一)을 본보기로 하여 1947년 1월부터 펼쳐졌다(서동만 2005:200). 물론 당시는 “근로자들의 일반기술수준과 문화수준이 매우 어린데다가 혹심한 기술난, 자재난, 원료난이 겹쌓여있”(고광섭 1974:42)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로동자, 기술자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고 자체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는 한편 실지 생산과정에서 나서는 기술적난관을 자체의 힘과 기술, 재능과 지혜로 풀고 기술을 혁신하여 생산의 높은 발전을 이룩하기 위”(고광섭 1974:42)하여 노력에 노력을 거듭했다. 다음은 흥남 비료 공장의 예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당시 북한의 공장에서 벌어졌던 학습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기능 강좌, 기술 학습회는 일정한 시간이 없이 수시로 열렸었다. 해방 후 첫 시기에 는 비록 자연 발생적이었지만 다수 직장에서 매일 같이 있었으며 하루 4시간으로 제정되어 있었으나 때때로 이 시간은 연장되었다. 여기에서 선생은 오랜 로동자들이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은 공장 내에서는 선생이 되었다가 다른 때는 학생으로 밤에 기술 전문 학교, 고등 기술원 양성소에서 전문 지식을 강의 받았다. 1947년 12월 말 현재 공장 내에는 60개의 기능 전습반이 조직되었으며 여기에는 2,291명이 망라되었다.⁶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이 과정을 통하여 양성된 고급기능자는 41명, 기능자는 861명이었고 기술자격시험에서 합격된 로동자는 11명”⁷ 에 이를 정도로까지는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기능전습반」이 조직되어 학습에 힘썼

왜 북한에서는 한자를 폐지하였는가?

다고는 하나, 거기에는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노동자들의 정치적·문화적 수준이 대단히 낮은 점은 무엇보다도 큰 애로였음에 틀림없다. 예를 들어 흥남 비료 공장의 경우, '1947년말 현재 전체 노동자의 62%에 달하는 5,800명이 해방 후 새로 들어 온 사람들이었던 데다가, 이들의 다수는 빈농민 출신'(리국순 1960:180)이었다. 이것은, 당시 노동자들의 반수 이상이 비숙련공이었으며, 또한 상당수가 문맹 내지는 반문맹이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노동자들 가운데에는 "1,000여 명에 달하는 문맹자들"과, 속성 성인 학교에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수 천 명의 국어 해득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리국순(1960:214)의 언급에서 바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이들 노동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교양」하여 「생산돌격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언어가 그들에게 쉽게 이해되는 것이어야만 했다.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과학기술 용어를 대중들이 알기 쉽도록 다듬는 문제, 즉 학술 용어의 대중화였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리익환(1950:18~19)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과학과 기술이 심지어 글'자까지가 지배 계급에 전속되어 있던 봉건시대에는 물론이 아니와, 자본주의 시대에 있어서도 과학 사상과 기술 지식은 오직 소수의 지배 계급에만 소속되었고, 절'대 다수의 근로 대중은 학술의 혜택에 대하여 거의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 용어와 학술 용어 사시의 계선은 명확히 존재한 사실을 우리는 잘 인식할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는 인류 사회의 보다 더한 민주주의하의 변형을 위하여, 과학의 대중화를 위하여, 즉, homo sapiens(지혜의 인간)으로부터 homo sciens(과학의 인간)에로의 이행의 촉진을 위하여 학술 용어를 반드시 대중에 뿌리 박고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쉬운 어휘로써 무겁게, 또한 순조롭게 제정함으로써 학술 용어와 일반 용어 사이의 계선을 어서 바빠 처리하여야 할 것을 또한 주장하는 것이다.

과학과 기술은 물론, 문자까지도 지배 계급만이 독점하고 있던, 봉건 시대를 넘어서, 식민지 시대의 질곡을 넘어서, 민주주의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근로 대중에게도 학술 지식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술 용어를 대중에 뿌리박고 있는 쉬운 용어로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가 된다.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용어의 평이화

가 필요'하다는 리익환(1950:29)의 언급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한'자 처리 문제, 즉 그 폐지 문제와 크게 관련되어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리익환 1950:21). 그러므로 한자의 폐지는 학술 용어(및 과학기술 용어)의 대중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2.2 새로운 사회의 건설과 「한자폐지」

앞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한자제한론」은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본격적인 반론은 리만규(1949b)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리만규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투옥되기도 했었고, 해방 후에는 『조선 교육사 1, 2』(1947, 1949)의 저자이자, “1948년 6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에 근로 인민당 대표로 김구·김규식 등과 함께 갔다가 평양에 남은”(심성보 1993:99)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론을 하기에 안성마춤이었다.

그는 우선 “요사이 한'자 문제에 있어서 한'자제한론이 생긴 듯한데, 이 의도가 어디있는지 나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한자를 장차 앞으로 없앨 전제라고도 하면서, 또 한'자는 글을 읽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도 하니, 두 말이 정반대인 자리에서 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한 입으로 하는 데는 더 이해할 수가 없는 일”(리만규 1949b:68)이라는 말로 포문을 연다. 그리고 나서 “한'자를 없애기 위한다 하니, 한'자를 없애려면 지금 없애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한'자의 불편을 느껴, 한'자에 대한 원망과 증오심이 더 늘어가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옳다”(리만규 1949b:68)고 말한다. 왜냐하면 “판일 몇자로 줄이여 가지고 편리하게 선전하며, 인민들의 한'자에 대한 애용심이 생겨, 그들이 없애는 것을 반대하게 될 때가 올 것”(리만규 1949b:68)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와 같이 한자를 제한하는 것은 “한자의 생명을 더 오래 살리는 작용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자의 생명이 길면 길수록 인민이 독서에 한자의 힘을 비는 버릇이 굳어지며, 국문만을 읽는 버릇은 줄고, 따라서 순 국문만을 읽는 취미와 능력이 감쇄(減殺)되어 국어 발달에 큰 지장을 일으키”며, 그 결과 “제 나라의 글에 남의 나라 문'자를 섞어

두가지 부호로 국문을 구성하는 국문이 오직 조선에만 있는 창피한 현상이 늘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한다(리만규 1949b:68~69). 즉, 제한적이거나 한자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나 인민 문화의 향상을 위해서나, 절대로 옳지 못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한자폐지론」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이, 당시 북한이 표방하고 있던 슬로건인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즉 당시 북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시하고 있던 「식민 잔재의 청산」 및 「봉건성의 극복」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2.2.2.1 언어 문제를 「식민 잔재의 청산」과 관련지어 생각할 때 우선 떠오르는 것은, 해방 당시는 물론이거니와, 지금까지도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는 일본어 혹은 일본식 한자어의 숙청일 것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나, 그러한 일본식 한자어가 조선어에 유입되게 된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한자의 문제는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인데, 일본에서 만든 한자어를 한국식으로 읽으면 그것이 곧 한국어라는 인식은 오늘날에도 일본어 유입의 주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그런데 해방 직후에는 일본식 한자어는 물론이거니와 일본어까지 범람하고 있었으며, 게다가 지나간 식민 통치를 거치는 동안 조선식이 아닌 일본식 한자 읽기가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자에 대한 문제의식은 더욱 절박했다. 그리하여 한자의 폐지 문제는 필연적으로 식민 잔재의 청산과도 관련이 되게 되는 것이다. 다음에 보는 최현배(1956:96~97)의 증언은 해방 직후의 언어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일인(日人)들도 한자를 쓰기 때문에, 우리 배달 거레에게 漢字, 漢文을 가르쳤다. 그래서, 우리들이 漢字 漢文을 배우기는 하였으나, 그 가진 지식은 순연히 일본스런(日本的) 지식이요, 조선스런(朝鮮的) 지식은 아니었다(얼마 동안은, 우리의 감정을 늦추기 위하여, 조선스러운 漢字, 漢文을 가르친 일도 있었으나, 이는 여기에 말하지 아니함). 일인 관리(日人 官吏)는 교육에서 일어를 강요하였을 뿐 아니라, 거리, 전차, 심지어 집안에서까지 일어를 강제하고 배달말을 금지하는 포정(暴政)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들의 한자에 관한 조선스러운 지식은 자꾸 줄어들고 없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

서 오늘날 일반 식자라도 30분 동안만 회화(會話)를 하면, 그말 가운데에서, 漢字語의 틀린 발음을 발견할 수 있으며, 또 일본스러운 문자를 쓰지 않고는 글월이나 말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일류 식자층의 사람들이 이러하니, 그 나머지 사람들은 말할것도 없으며; 더구나, 중학생, 소학생, 들은 한글 사이에 漢字를 섞어 써 놓으면, 아무리 쉬운 漢字라도 도저히 조선음으로 읽지 못하고, 반드시 일본말, 일본음으로 읽는다. 이는 천하의 학부형, 교사들이 함께 아는 기막히는 사실(事實)이다.

즉, “지난 일본의 압박 정치 시대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일본말로 漢字를 배웠기 때문에, 漢字를 대하면, 문득 「일본」식으로 그 자를 읽게 되며, 심지어 일상의 화화에서도, 「일본」말식으로 한자말(漢字語)을 발음한다. 이를테면, 「輸送」(수송)을 「유송」이라 하며, 「番地」(번지)를 「반지」라 함과 같다. 실로 기괴망칙한 현상이 많다”(최현배 1956:20)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비뚤어진 읽기를 버리고서 새로운 조선 식 발음을 배우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 아니다.”(최현배 1956:20) 다시 최현배(1956:97~98)의 주장이다.

만약, 소학생, 중학생이 漢字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다면 차라리 가르치기가 덜 곤란하겠지마는, 위에 말한 바와 같이, 그네들이 이미 漢字에 대한 일본스러운 지식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스러운 漢字 교육을 베푸는, 먼저 잘못된 일본스러운 지식을 바로잡은 연후에야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짧게 말하면, 30년 동안의 일본의 노예 교육, 동화 정책(同化政策)은 우리 조선 사람에게서 한자에 관한 조선스러운 지식을 완전히 빼앗아 버렸”(최현배 1956:98)기 때문에 한자 교육을 이중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북한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았음은, 방향은 조금 다르지만, 리익환(1950:13)의 다음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다.⁸

(한자는) 문'자 생활과 언어 생활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극도로 절연(絶緣)시키었으며, 더우기 그후 일제의 노예 교육 정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과학 독점과 조선 어문 발전에 대한 억압 정책으로서 과학은 우리 인민들과 유리되고, 따라서 조선어로서의

왜 북한에서는 한자를 폐지하였는가?

과학용어 창조는 아무런 발전도 가져올 수 없었으며, 학술 용어는 한'자로 된 그들의 용어가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아직 통일 정리 되지 못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의 학술 용어는, 해방후 북반부에서 비약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인민의 과학을 담는 용기로서 수다한 결점들을 내포하고 있어, 우리 어문 발전에도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다.

봉건 시대에는 한자로 말미암아 언어와 문자가 단절되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게다가 식민 통치를 거치면서 일본식 과학 용어들이 대량으로 유입되어 조선어를 통한 과학 용어의 창조는 제한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그러한 용어들이 해방 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다. 아니, 남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실은 그러한 용어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었을 것임은, 앞의 최현배(1956:96~97)의 증언은 말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식민 통치의 결과로 조선어에 들어온, 한자어로 된, 일본식 학술 용어는 인민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것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조선어의 발전은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었음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자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2.2.2.2 봉건 잔재의 청산을 위해서도 한자는 폐지될 필요가 있었다. 한자는 소수의 유한계급만이 쓰는 봉건적 문자(최현배 1956:45)이자 유교적 문자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선에서는 기본적으로 한자는 「한자어」가 아닌 「한문」의 표기에 사용되는 것이 원칙(イ・ヨンスク 2001:182)이었다는 데에서도 드러난다. 이와 관련하여 「최초의 국한혼용서」라고 말해지고 있는 유길준의 『서유견문』(1895)의 서문에 나오는 다음 구절을 보기로 한다.

書既成有日에 友人에 게示호고 其批評을 乞호니 友人이 曰子의 志는 良苦호나 我文과 漢字의 混用은 奚이 文家의 軌度를 越호야 具眼者의 譏笑를 未免호리로다(『西遊見聞』 序, 5쪽)

즉, 『서유견문』이 완성되어 친구에게 보여 비판해 달라고 했더니, 내용보다도 우리 글(我文)에 한자를 섞어 쓴 것이 안목이 있는 사람들의 비방과 조소를 사리라고 말하더라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 지식인들의 언문에 대한 태

도가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라 할 수 있다.⁹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유길준은 “我文은則我先王朝의 糊造한신人文이오漢字는中國과通用한者라余는猶且我文을純用하기不能함을是歎호노니”(『西遊見聞』序, 6쪽)라고 함으로써, 오히려 전부를 우리 글(我文)로 쓰지 못했음을 한탄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유길준 개인의 한계라기보다는 시대의 한계였다.

그리고 『서유견문』에서 시작되었다는 「국한문 혼용체」와 관련하여 또 하나 우리가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이러한 문체가 실은, 일본의 「한문 혼독체」를 독자적으로 조선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성립한 것이었다는 사실이다(イ・ヨンスク 2001:182). 이것은 유길준이 조선 최초의 유학생으로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에서 1년 반 이상이나 새 학문을 공부하였으며(이광린 1999:85), 당시 후쿠자와와 조선인의 교육상 그 문장을 평이하게 하기 위하여, 유길준이 자신의 미타(三田) 집에 기거하고 있을 때에, 유길준에게 명하여 『文字の教』의 문장을 한언(漢諺) 혼용으로 번역시켰다(石河幹明 1932:298)는 기록에서도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다.

반면에 한글은 근대적인 문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훈민정음과 한글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이 둘은 뿌리는 같다고 할지라도, 그 본질은 같은 것이 아니다. 훈민정음은 봉건 군주가 ‘백성을 어여뵈 여겨’ 새로이 만들어 백성들에게 ‘하사’한 문자라면, 한글은 이미 봉건적 외피를 탈피하고, 근대적인 문자로서 새롭게 탄생한 민중의 문자, 대중의 문자이다. 한마디로, 훈민정음은 봉건 군주가 훈민(백성들을 훈도)을 위하여 만든 유교적·봉건적인 문자임에 비하여, 한글은 그 기원 및 외피는 훈민정음이나 거기에 근대적 알맹이가 더해진 민주적·근대적 문자인 것이다.¹⁰

문자가 가지는 봉건적·종교적 성격에 대한 비판은 당시의 조선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었다. “혁명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무렵, 1920년대에 들어서면, 러시아 연방, 이어서 소련방에서는, 혁명은 언어와 문자에도 미쳐야 한다는 분위기가 높아졌다. 거기에서 러시아 문자는, 봉건제와 가부장제에 연결된, 구패로 반동적인 문자라고 생각되었다. 아라비아 문자에 이르서는, 종교와 분리할 수 없는, 반사회주의적인 문자라고. 이러한 생각에서, 러시아어도 포함한 모든 언어에 대하여, 라틴화의 방향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田中 1992:187)는 것은 그 좋은 예이다. 이것은 문자가 가지는 봉건적·종교적

성격에 대한 비판이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일반적이었음을 말해 주는 사실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몽고의 문자개혁이나 중국에서의 문자개혁 시도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그 본질을 잡아 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에서 한자를 봉건적이라고 비판하는 다음의 글들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읽어 낼 수 있다.

(한자는) 수재의 글자요 대중의 글자가 아니며, 량반만 글을 읽는 봉건식 글자요, 인민의 글자가 될 수는 없다. 그리하여 우리 글에서 한자를 폐지하기를 주장하게 되어, 자수 제한, 혹은 괄호안 글자로 차차 폐지되어 가려는 길에 올라서 있다.(리만규 1949a:7)

한자가 가지는 봉건성은, 우선 그것이 「귀족의 문자」라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사서오경 등의 유교 경전이 아니라도 한문으로 문자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귀족에 한정될 수밖에 없음을 여기서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문자를 소유한 사람들만이 권력을 소유한다. 왜냐하면 문자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사회적 의사소통망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근대 사회에서는 양반만이 글을 배울 여유가 있었으며, 또 그 배운 글을 토대로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벼슬에 나아가 권력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데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언어와 문자가 가지는 귀족적 성격은, 필연적으로 그것을 독점하는 계급이 그 문자를 이용하여 ‘인민을 통치하는 억압의 기구’로 기능하게 한다. 예컨대 오늘날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에서 민족어(또는 모어 또는 제 1언어)가 아닌 영어나 프랑스어, 혹은 포르투갈어 등이 공용어로 채택됨으로써 기득권층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예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각국에서는, 유럽어를 구사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이거나 대통령이 될 수 없으며(宮本 2002:26), 법정에서는 재판관에 대하여 ‘Your honour’, ‘My lord’와 같은 관용어, 심지어는 ‘post-mortem’, ‘sub judice’와 같은 라틴어 표현까지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민중들이 법 문화에 쉬이 접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다(宮本 2002:25~26). 리만규(1949b:60)가 “한’자는 벌써 수천년 전에 조선

에 들어와서, 조선의 고유 문'자의 발생을 지연시키고 또 한글의 발전을 방해하면서 특수 계급이 인민을 억압 통치하는 문화의 무기로 되고, 조선의 고유한 말을 말살시키고 조선의 문화 발전을 뒤떨어지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한'자로 된 단어를 함부로 만들어 내어 대중이 알 수 있는 익은 국어를 쓰지 않고, 대중이 리해하기 어려운 말을 쓰는” 것은 “귀족적 언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말이다(리만규 1949b:65). 예를 들면, 「늦되는 아이」란 말을 「지진아」(遲進兒)로, 「구원의 별」을 「구성」(救星)으로, 「집토끼」를 「가토」(家兎)로, 「모든」을 「제」(諸)로, 「예'절」을 「고사」(古寺)로, 「없어」를 「결핍」(缺乏)으로 쓰는 따위”(리만규 1949b:65) 등 그러한 예는 얼마든지 있다. 이와 같이, 한자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거나, 혹은 고유어가 있음에도 그에 해당하는 새로운 한자어를 만들어 내는 것은, 일반 대중을 언어로부터 소외시킴으로써 자신들만이 권력을 독점하고자 했던 귀족들의 권력욕에 다름 아니었다.

이러한 문제점과 더불어, 한자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문자 및 운용 능력의 습득에 시간이 대단히 많이 필요한 문자였다. “한'자는 원래 배우기도 어렵고 쓰기도 힘 들 뿐만 아니라 그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것을 배워 가지고 인민들이 글을 쓰게 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 언어 문화 연구실 1963:33)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들어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는 “한 평생에 글만 읽는 봉건 귀족의 글'자는 혹 될는지 모르나, 근로 대중의 글'자로는 도저히 될 수 없”(리극로 1950:3)으며, “한'자를 가르치어서 문맹을 없앤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리극로 1950:11)이 되는 것이다. 반면, 한글은 마음만 먹는다면, 나이를 불문하고, 그것을 배우는 데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게다가 한자는 근대적인 기술의 이용에도 대단히 불편한 문자였다. 다음의 리극로(1950:3)의 언급은 이를 지적한 것이다.

한'자가 현대적 문'자로 될 수 없다는 것은 전보(電報)의 기호를 불일 수 없다는 한 가지 사실로 미루어서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전보를 치는 한가지의 가능한 방법이라는 것이 곧 상용(常用) 글'자에 번호를 붙이여 놓은 것이다. 그리하여 전보를 번호 수'자로만 치는 것이다. 전보를 받고도 곧 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전보에 쓰는 글

'자의 번호책에서 그 글'자들을 찾아 내어야 비소로 글을 알게 된다. 그리고야 어찌 현대의 글의 행사를 할 수 있겠는가?

근대적인 문명의 이용이야말로, 문자적 측면에서의 봉건성의 극복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의 하나인 전보와 같은 것은 한자를 쓰고 있는 조건 하에서는, 불가능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단히 불편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한자는 이를 위해서도 쓰지 않는 편이 훨씬 더 편리해지는 것이다.

3. 한자폐지론의 승리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에서의 「한자제한론」과 「한자폐지론」은 각각의 근거를 가지고는 있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1948년 하반기부터 대중용 출판물에서 먼저 한자가 자취를 감추고 이어서 1949년 3월부터는 전면적으로 폐지되게 되는데(전혜정 1987:121),¹¹ 이것은 「한자폐지론」이 「한자제한론」을 누르고 승리했음을 의미한다. 「한자제한론」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서는, 1946년 11월부터 1949년초까지 광범위하게 행해진 「문맹퇴치운동」을 먼저 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문맹퇴치운동」 과정에서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배운 것은 ‘한글의 읽고쓰기 및 간단한 가감승제’였으므로, 한자를 사용하게 되면, 이들이 다시 문맹 상태로 돌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도 「한자제한론」은 패배가 예정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당시 북한의 언어 정책을 주도했던 조선어문연구회가 다음 목표로 삼고 있었던 것은 「문자개혁」이었고, 「문자개혁」은 한자를 쓰는 상황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던 까닭이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보았던 박상준의 「한자제한론」에 대하여, “과거의 현상을 모두 정당화하면서 미래를 고식적으로 개량하려는 수법”이라는 격렬한 비판이 학계에서도 리익환(1950:23)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가연물(可燃物), 강성(剛性) 등등의 용어가 현재 우리에게 비효과적인 것이라면, 오직 과거의 것이라면, 우리는 이 과거의 것을 뜯어 고칠 만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용어

들에 취사선택을 가하는 일방으로 새로운 말조직을 실시함이 없이는 우리가 희망하는 최고 목표의 달성은 방법론적으로 곤란할 것이며, 설사 이 목적이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목적의식적으로 우리가 예기한 바와 같은 그러한 좋은 효과는 보이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이 옳지 않은 과거의 것들을 개혁적으로 혁명적으로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용어들이 대개 그 원말에 대한 일본인들의 한'자식 번역인데, 우리는 한'자어라면 무조건하고 조선어로서 맹목적으로 접수하는 경향들이 많으며, 그 내용인 원뜻을 생각하여 보지도 않고, 단지 그 표면인 일본 제품만을 조선식으로 가장하는 버릇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귀울림을 근자에 와서 더욱 많이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경향들은 우리 지식층으로 하여금 고골적인 용어보다도 은폐적인 용어를 용어답다고 생각하게 하였으며, 음절많은 용어들보다 음절적은 용어들을, 알아듣기 쉬운 말들보다도 알아듣기 거북한 말들을 학술적으로 용어답다고 간주하게 하였는데, 이는 곧 한'자 자체의 계급성과 결부된 과거의 학문의 비민주주의적 성격을 표시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와서 우리가 학문의 민주화를 주장하며, 용어를 역시 민주화하여야 할 것이라면, 용어는 그 내용을 가장 평이한 말로 인민에게 전달하는 것 이외에 아무 다른 사명은 없을 것이다.(리익환 1950:23)

즉, 한자를 보지 않으면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은, 그것을 그대로 쓸 것이 아니라, “「가용물」보다는 「용해성 물질」이, 「녹는 물질」이 또는 「녹을 물질」이 보다 효과적”이 아니겠느냐고 그는 반문한다(리익환 1950:24). 그것은 의미를 잘 알 수 없는 일본식 한자어를 극복하는 길이자 학문의 민주화의 첩경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잘못된 근원은, “말이 없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신통히 여기지 않는데 있는 것이며, 근본적인 문제를 망각하고 지엽적인 문제에 분망한데 있는 것이다. 낡은 의식을 개혁하지 못하는데 있는 것”이다(리익환 1950:24). 그리고 그와 같이 바꾸는 것이야말로 “낡은 인습에 무뎠은 과거 인텔리겐차에게도 그리 귀서투르지 않을 뿐더러, 자라나는 새 동무들에게는 한'자의 속박을 벗기 위하여 유일한 방법이며, 국제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언어 생활 방식을 통일시키는 진보적인 로선”(리익환 1950:24)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로선으로 이러한 방법으로써 이미 존재하는 한'자 용어들을 낱날이 검토했으며, 그 원뜻을 해명하며 조선어답게 이를 수정하는 사업을 광범하게 심각하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과감하게 진행한다면,

용어의 제정과 통일은 비교적 짧은 시일에 가능할 것이며, 이와 아울러 한'자 폐지 문제는 급속히 해결될 것”(리익환 1950:24)으로 전망한다. 이어서 그는, “한'자 폐지는 용어 통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연 발생적인 언어 현상에 어느 정도 인공적인 발전 촉진을 가하여야 할 것”이라면서 (리익환 1950:24~25),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해방후 수많은 민주개혁들로 말미암아 농민 대중은 토지의 주인이 되었고, 노동자들은 노동 법령의 혜택을 받게되었는데, 다만 과학적 사유의 도구인 학술 용어는 아직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어, 이는 목과할 수 없는 긴급한 과업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다. 마땅히 용어 통일은 어문 연구회와 용어 사정 위원회의 당면한 가장 중대한 과업으로 되어야 하며, 반드시 급속히 본격적으로 조직적으로 진행시켜야 할 큰 사업이다.(리익환 1950:30)

이러한 비판이 있었던 때문인지, 그 후 「한자제한론」은 자취를 감추었으며, 한자는 폐지될 운명에 처했고, 실제로도 학술 용어 등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급격히 폐지되어 갔다. 우선, 대중을 위한 신문과 잡지 등에서 먼저 폐지되었으며, 이어서 과도적 조치로서 괄호 안에 한자를 병용하는 시기를 거쳐, 중국에는 전면적으로 폐지가 되었다.

4. 맺는 말

4.1 지금까지 우리는 해방 직후 북한에서 있었던 「한자제한론」과 「한자폐지론」을 검토해 보았다. 문자에 관한 문제는, 나라를 막론하고, 격렬한 논쟁을 동반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것은 북한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직접 관련되는 논쟁, 바로 그것이기도 했다. 이제 이 글에서 논의한 바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2 박상준에 의하여 제기된 「한자제한론」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우선 학술 용어 문제가 있었다. 즉, 한자를 폐지하고 한글로만 문자 생활을 하게 된 결과, 한자를 보지 않고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말들이 적지 않게 등장한 것

이다. 게다가 조선어 교육의 관점에서도 200자 정도의 한자를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그 근거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자제한론」은 당시의 북한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사회의 건설과 제반 「민주개혁」에 모든 것을 걸고 있던 당시 북한의 상황에서는, 제한적이거나 한자를 다시 사용한다는 것은 「민주개혁」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토지개혁」 및 「중요산업시설의 국유화」와 같은 「민주개혁」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은 왜 단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등을 인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북한 인민들은 기껏해야 「문맹퇴치운동」을 통하여 배운 간단한 가감승제와 한글의 읽고쓰기 정도밖에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한자를 부활시킨다는 것은 「문맹퇴치운동」을 완전히 무로 돌리는 것이 될 터였고, 그것은 또한 인민들을 새로운 사회의 건설에 동원할 수 없음을 의미했다. 이처럼 한자의 폐지는, 언어적인 이유에 의한 것보다는 사회 개혁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 개혁을 포기하지 않는 한, 단행하는 것 이외의 다른 길이 있을 수 없었다. 게다가, 당시 조선어문연구회를 비롯한 언어 정책을 주도했던 기관 혹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노렸던 것은 「문자개혁」이었으므로, 한자는 더욱 써서는 안 될 형편이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한자를 부활시키는 대신에 「언어정화」의 길로 나아갔고, 그것은 「문자개혁」의 전 단계이기도 했다.

4.3 그러나 이 글은, 북한에서 왜 한자가 폐지되었는가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었으므로, 아직 다루지 못한 문제들도 적지 않다. 예컨대, 「한자폐지」의 결과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언어정화」의 문제, 그리고 그들이 당시 최종 목표로 삼고 있었던 「문자개혁」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주

- 1 「국어기본법」은 「http://www.mct.go.kr/open_content/administrative/laws/laws_view.jsp」에 그 전문이 실려 있다. 이 글에서의 인용도 거기서 한 것이다.

- 2 이를 박상준(1949:50)은 “한'자어로 처리함이 편리한 한'자어”라 하고 있다.
- 3 (인용자 주) “실용 한'자 제정 분과 위원회”의 이탤릭 부분은 복사가 불분명하여 판독이 잘 되지 않는다.
- 4 이 절에서의 이상의 논의는 고영진(2005:384~387)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 5 전해정(1987:80)에 따르면, 당시 북한 주민의 80%가 농민이었는데, 농민들 가운데의 90%가 문맹이었다고 한다.
- 6 《로동 신문》1947년 12월 3일. 리국순(1960:189~190)에서 재인용.
- 7 《로동신문》1947년 12월 3일. 고헌섭(1974:42)에서 재인용. 이 통계는 리국순(1960:189~190)에도 인용되어 있는데, 두 기록의 수치는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 8 최현배의 『글자의 혁명』의 초판이 나온 것은 1947년 5월이었는데, 남북의 왕래가 비교적 자유로웠던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이 책은 당시 북한에서도 여러 모로 참고했을 가능성이 많다. 일례로 리만규(1949b:60~61)에는 이 책이 인용되어 있다.
- 9 이와 같이 당시 지식인들의 언문에 대한 거부감이 몹시 강했었기 때문에, 이른바 개화기에 발간된 신문들은 지식인이나 관료를 주 독자층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순한문 혹은 국한문 혼용체를 채용했고(『한성순보』 및 『황성신문』 등), 일반 대중이나 여성을 주 독자층으로 했을 경우에는 순한글체(『매일신문』 및 『제국신문』 등)로 발간했던 것이다(김영민 2005:107~108).
- 10 이에 대해서는 김하수(1993) 참조. 이 글은 「http://www.hangeul.or.kr/hss_93.htm」에 실려 있다.
- 11 그러나 앞서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실제로 한자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그 한참 후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고영근(1994:197~203) 참조.

< 참고 문헌 >

- 고광섭(1974),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군중적애국 운동으로 벌어진 건국사상총동원운동”, 『력사과학논문집』 5, 사회과학출판사, 25~78.
- 고영근(1994), “북한의 한글전용과 문자개혁”, 『통일 시대의 어문 문제』, 길벗, 167~234.
- 고영진(2005), “해방 직후 북한의 「문맹퇴치운동」에 관한 일고찰”, 『言語文化』 8-2, 381~408.
- 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 언어 문화 연구실(1963), 우리 생활과 언어, 군중 문화 출판사.
- 김민수(1984), 국어정책론, 탑출판사(재판).
- 김성보(2000),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역사비평사.

- 김영민(2005),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 과정, 소명.
- 김인호(1975), “우리 당이 실시한 한자폐지는 그 거대한 생활력을 힘있게 나타내었다”, 『언어학론문집』 1, 사회과학출판사, 251~290.
- 김일성(1946a), “토지개혁의 총결과 금후 과업”, 김준엽 외 공편(1969:55~73).
- 김일성(1946b),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산업 철도 운수 체신 은행등의 국유화에 관한 법령발표에 대하여 조선인민에게 고함”, 김일성(1949:107~114).
- 김일성(1946c), “북조선민주선거의 총결과 인민위원회의 당면과업”, 김일성(1949:177~202).
- 김일성(1947a), “조선정치형세에 대한 보고”, 김일성(1949:215~250).
- 김일성(1947b), “1947년도 북조선인민경제발전에 관한 보고”, 김일성(1949:251~288).
- 김일성(1949),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제1권, 국립인민출판사.
- 김준엽 외 공편(1969), 「북한」 연구 자료집<제1집>, 고려대학교 출판부.
- 김하수(1993), “한글에 대한 재평가”, 『한글 새소식』 245호.
- 리국순(1960), “홍남 비료 공장 노동자들이 걸어 온 승리의 길”, 『력사론문집-사회주의 건설편』, 과학원 출판사, 125~311.
- 리극로(1950), “중국의 「새글자」 운동”, 『조선어 연구』 2-2, 2~11(역락출판사 영인본).
- 리만규(1949a), “우리글 가로쓰기”, 『조선어 연구』 1-2, 4~11(역락출판사 영인본).
- 리만규(1949b), “동양에 있어서의 한'자의 운명”, 『조선어 연구』 1-6, 55~71(역락출판사 영인본).
- 리익환(1949), “의학용어 제정에 관하여”, 『조선어 연구』 1-3, 57~66(역락출판사 영인본).
- 리익환(1950), “학술 용어 통일 방법론”, 『조선어 연구』 2-2, 12~30(역락출판사 영인본).
- 박경출(1949), “출판물에서 보는 우리말”, 『조선어 연구』 1-1, 85~98(역락출판사 영인본).
- 박상준(1949), “한'자와와 한'자의 정리에 대하여”, 『조선어 연구』 1-3, 37~56(역락출판사 영인본).
- 산업국장(1947), “1947년도 북조선에 있어서의 산업생산계획완수를 위한 보고”, 김준엽 외 공편(1969:226~235).
- 서동만(2005),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1945~1961), 도서출판 선인.
- 신효숙(2003), 소련군정기 북한의 교육, 교육과학사.
- 심성보(1993), “야자 이 만규 선생의 삶과 교육”, 『얼음장 밑에서도 물은 흘러』, 한글학회, 88~100.
- 유길준(1895), 서유견문, 유길준전서편찬위원회 편(1971), 유길준 전서(I), 일조각.

왜 북한에서는 한자를 폐지하였는가?

- 이광린(1999), 한국 개화사 연구, 일조각(전정판).
 이종석(2000),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전해정(1987), 문맹퇴치경험,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 편(1973), 조선로동당정책사(언어부문), 사회과학출판사.
 최현배(1956), 글자의 혁명, 정음사(집고 고침).
 한글 학회 50돌 기념 사업회(1971), 한글 학회 50년사, 한글 학회.
 이·욘스크(1996), 『『国語』という思想』, 岩波書店.
 이·욘스크(2001), 文字から文体へ, 山中桂一・石田英敬編(2001:175 ~ 194).
 石河幹明(1932), 『福沢諭吉傳』(第三卷), 岩波書店.
 牛島徳次・香坂順一・藤堂明保編(1967), 『言語』(中国文化叢書1), 大修館.
 興水 優(1967), 中国の文字改革, 牛島徳次・香坂順一・藤堂明保編(1967:391 ~ 406).
 田中克彦(1992), 『モンゴル—民族と自由』, 岩波書店.
 村井実(1979), 『アメリカ教育使節団報告書全訳解説』, 講談社学術文庫.
 宮本正興(2002), ことばと社会の生態史観, 宮本正興・松田素二編(2002:24 ~ 52).
 宮本正興・松田素二編(2002), 『現代アフリカの社会変動』, 人文書院.
 山中桂一・石田英敬編(2001), 『言語態の問い』, 東京大学出版会.

なぜ北朝鮮では漢字を廃止したのか?

Why were Chinese characters(*Kanji*) abolished in North Korea?

코·욘진(KO, Young-jin)

本稿の目標は、独立直後の北朝鮮における「漢字制限論」と「漢字廃止論」を検討することにより、なぜ北朝鮮では漢字を廃止したのかを明らかにすることにある。文字に関する問題は、国を問わず激しい論争を伴うものだが、それは北朝鮮でも例外ではなかった。特に北朝鮮においてのそれは「反帝反封建革命」と直接かかわる論争でもあったという点で注目すべきである。

北朝鮮の「漢字制限論」の背景には学術用語の問題があった。ハン글のみで文字生活を営むようになった結果、漢字を見ずには意味の把握できない単語が非常に多かったのである。それに加えて朝鮮語教育の観点からも200

字ほどの漢字は教えた方がより効果的というのがその根拠だった。

しかし新しい社会の建設や「民主改革」に全てをかけていた当時の北朝鮮において、「漢字制限論」の立つ瀬はどこにもなかった。なぜならば、いくら制限的とはいえ、再び漢字を使うことは、「民主改革」の後退を意味していたからである。即ち、230万に達していた非識字者にハングルの読み書きを教えることにより、人民たちを説得し、新しい社会の建設に参加させようとして始まった「識字運動」がその背景にあったのである。それと共に、当時の北朝鮮の言語政策を主導していた機関および人々が狙っていたのは「文字改革」であったため、「漢字制限論」はさらに弱い立場に陥らざるを得なかった。その結果、北朝鮮では漢字を復活させる代わりに「言語浄化」の道に進んだが、それはまた「文字改革」の前段階でもあった。

Keywords: Abolition of Chinese characters, Restriction of Chinese characters, Literacy Movement, Language Planning